

전북 소상공인정책 '생존'을 넘어 '성장의길'로 대전환 필요하다

연구책임

김수은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고희운 연구위원

정미선 연구원

J.T.H.I.N.K.



이슈브리핑 요약

-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으로 소상공인정책은 독립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K-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임
- 지역 단위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서도 ‘육성’, ‘성장’, ‘선별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전북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성장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회적 안전망에 투입되는 예산의 약 1/3 수준으로 소상공인 성장과 육성을 위한 예산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며, 소상공인 업무 담당인력 1인당 20,325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정부와 타 지자체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춰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부산시의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이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창업-성장-도약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부산 라이콘(B-LICON)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소상공인 성장육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북 소상공인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을 제안함. 소상공인을 단순히 법정 정의에 따른 기준이나 생애 주기로 구분하기 보다 산업단계,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맞춤형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성장패키지 시범사업을 제안함. 소상공인 성장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 패키지로 성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전북 소상공인 성장촉진기금 조성을 제안함. 지역경제 주체로서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투입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 함
- 넷째, 소상공인 정책 지원 조직 위상 강화를 제안함. 소상공인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함
- 다섯째,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전달-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함

I. 전북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정책의 필요성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이자 지역의 핵심 고용 창구

-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라고 할 수 있음
 - 음식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형성
- 소상공인 부문은 지역의 고용 수준과 소비력을 유지하는 1차 방어선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유지 시켜 줌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 부문은 고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의 역할 수행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밀착 대응 필요

-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으로 소상공인정책은 독립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보호 및 지원의 포용적 관점에서 추진된 소상공인 정책에서 성장과 육성의 관점으로 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것임

경제주체로서의 관점인 성장형 육성지원으로 정책 대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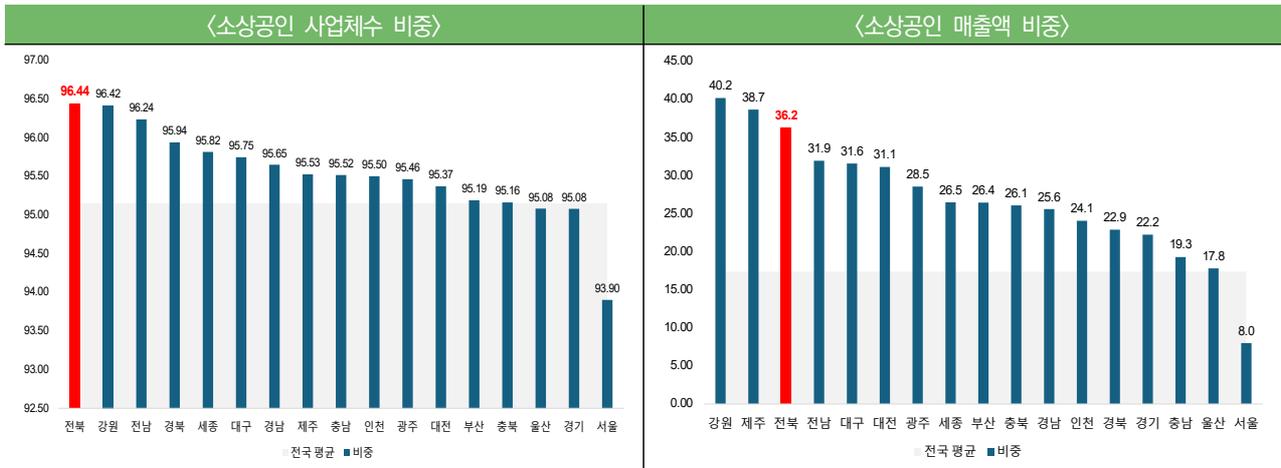
-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와 고용 부문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비해, 현재의 지원 체계는 그 중요성에 걸맞은 조직 역량과 재정적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보다 위기 발생 시 피해보전(생존지원)이나 초기 창업자금 지원 등 '보호', '유지', '보편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육성', '성장', '선별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II. 전북 소상공인 특징 및 정책 현황

1. 전북 소상공인 특징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전북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총 383,238명으로 도내 총종사자 중 6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45.9%)보다 16.9%p 높은 수준으로 강원(6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도내 사업체 수 대비 2019년에는 96.0%에서 2023년에는 96.44%로 증가하였음
 - 이는 2023년 소상공인 전국 평균비중(95.15%)보다 더 높은 수치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강원(96.42%)으로 나타남
-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총 392.8억원으로 도내 사업체 매출액 대비 36.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평균(17.3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



출처 : 중소기업 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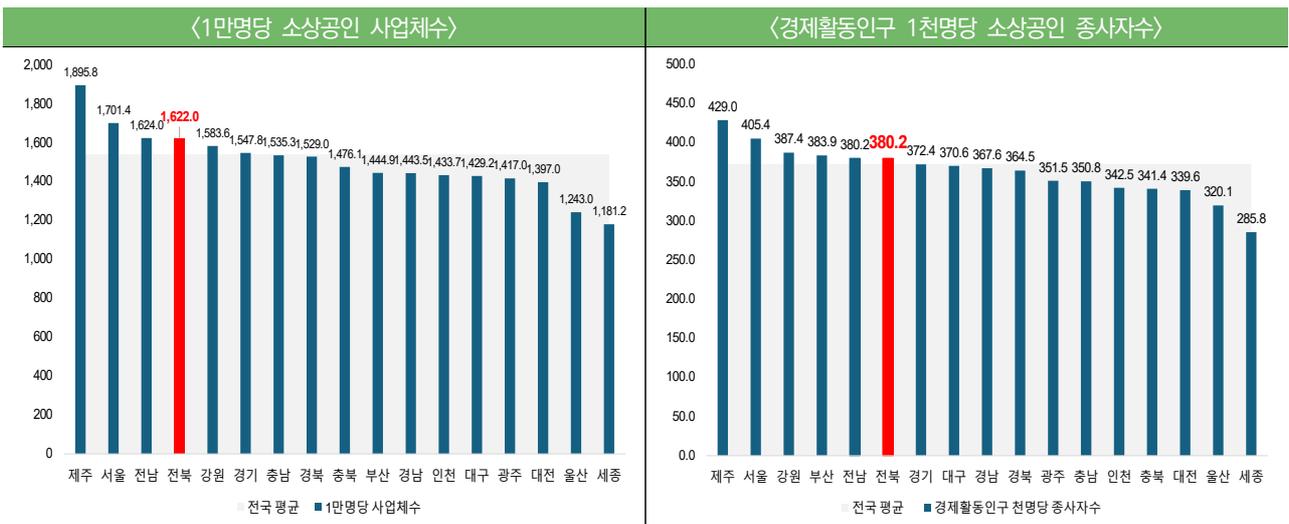
전북 소상공인 부문은 경쟁력이 낮고 과밀한 구조

- 소상공인 업체당 매출액은 1.380억원으로 전국 평균(1.616억원)에 비해 2,356만원 낮고, 업체당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국 평균(1.38)보다 낮은 수준



출처 : 중소기업 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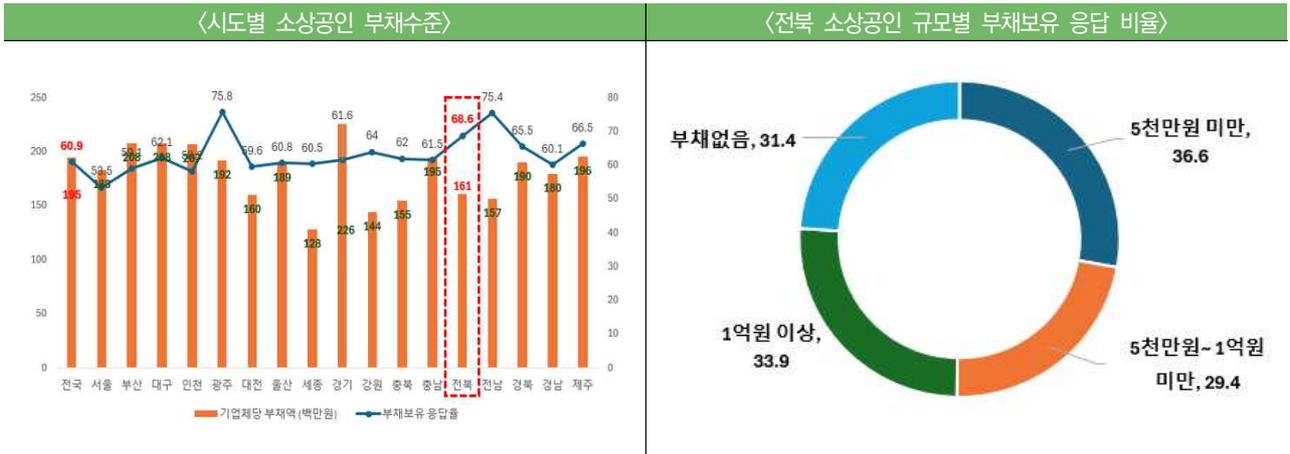
- 소상공인 사업체수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인구 1만명 당 사업체수,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종사자수는 각각 1,622.0개, 380.2명으로 전국 평균(각각 1,541개, 373.2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출처 : 중소기업 기본통계

○ 도내 소상공인은 금융조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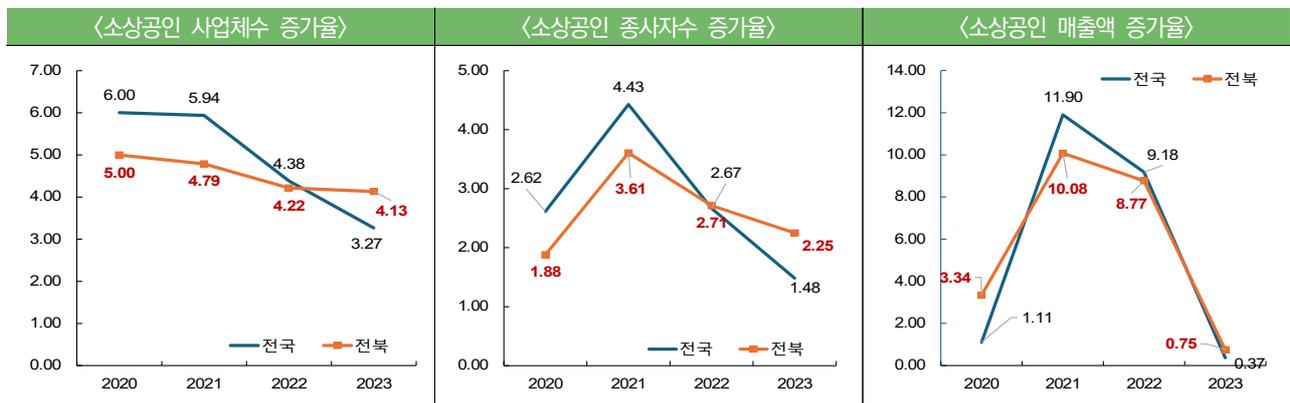
- 전북은 대출 비중이 68.6%로 전국에서 3번째로 부채가 있는 사업체 비중이 높고, 기업체당 부채액은 161백만원임(전국 평균 195백만원)
- 부채보유 응답 소상공인들은 5천만원~1억원미만의 소액 부채 비중이 높음



출처 : KOSIS, 소상공인 실태조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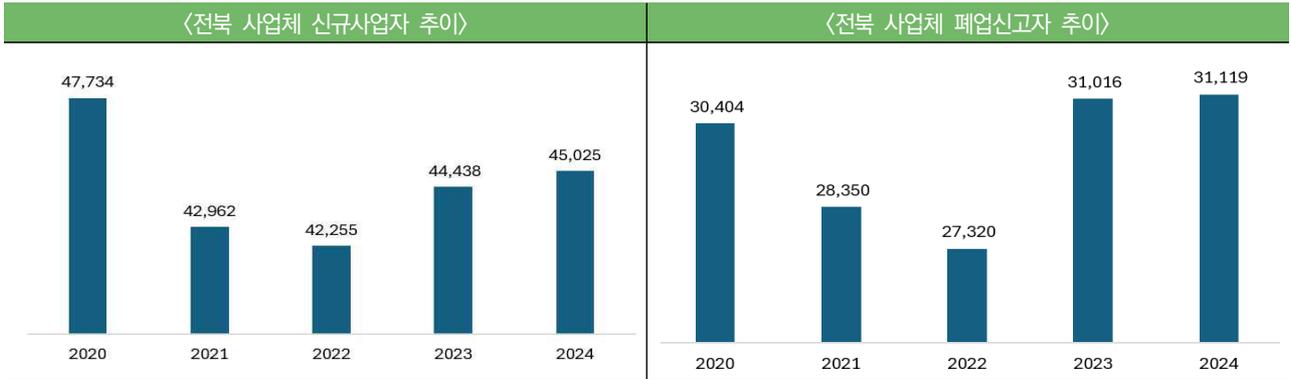
최근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 저하

- 고금리, 고물가, 소비둔화 등 경제 전반의 불황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지역 생활서비스와 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소상공인의 위기는 도민 삶의 밀착 버팀목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전북은 '22년에 전국 대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모든 면에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3년 들어 전국 대비 모든 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3년 기준, 전북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폭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하락 속도는 전국에 비해 완만한 편임



출처 : 중소기업 기본통계

- 2024년 전북지역 사업자 폐업 신고건수는 31,119건으로 2022년(27,320건)에 비해13.9% 증가하였으며, '사업부진'이 폐업 사유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됨(국세통계, '25.7월 발표자료)
- 신규사업자와 폐업신고자 수 격차는 '20년 17,330건에서 '24년 13,90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지역고용창출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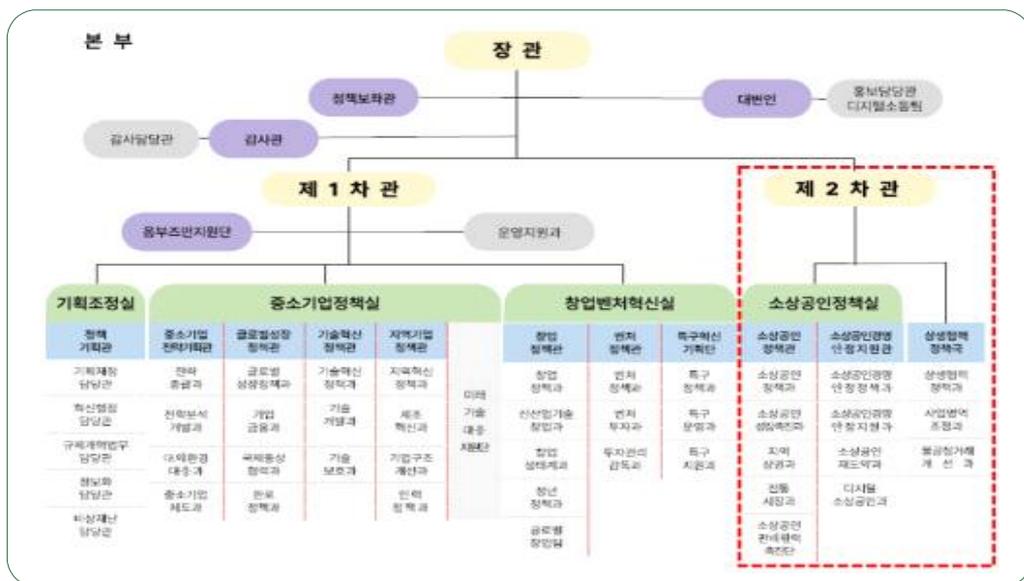
2. 전북 소상공인 정책 여건

①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조직

- 소상공인 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의 영역으로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관 산하 소상공인정책실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실 내에는 정책 수립 및 총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상생협력정책국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전담 조직 구성〉



출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성장 지원정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소상공인지원법 제21조)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와 소상공인 라이프사이클에 맞춤형 특화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주요 내용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적인 아이템, 기업가 정신, 창의성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소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의 핵심적인 사다리 역할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화 자금, 멘토링, 컨설팅) - 투자 연계 지원(AC, VC 등 민간투자 유도 및 사업화 자금 매칭으로 성장 가속화 지원) - LICORN(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소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며 숙련된 노하우와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정책	- 백년가게(제조업분야 업력 15년 이상 숙련 기술 기반 우수소공인) 육성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장축진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는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성장사다리 역할	- 자동화 설비 도입, 스마트 기술 활용,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 등 성장과 도약을 위한 투자추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사다리	- TOPS 프로그램 :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 - 디지털 및 글로벌 진출 : 1:1 컨설팅, 실전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입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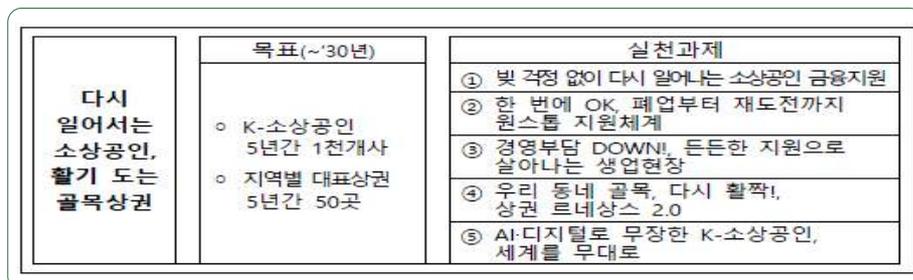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발췌하여 저자 정리

- 정부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경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자금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최대 1억원) 소상공인의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61(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도는 골목상권)

-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령화,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잉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 생태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혁신을 통한 지역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K-컬처와 연계한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K-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함

〈소상공인 관련 국정과제 체계도〉



출처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자료

②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관련 제도

- 소상공인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운영되어오다가, 경제주체로서의 소상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 소상공인 지원·육성·보호 시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소상공인 관련 법률〉



출처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국회토론회 발표자료(2025.6.26.)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할 목적으로 제정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등이 있음

〈전북 소상공인 관련 조례〉

명칭	주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6.5.9.)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행 지원사업의 범위, 소상공인 단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10.04.)	지역상권 기본계획의 수립, 상가건물 상생협력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5.3.7.)	지원계획 수립,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과 운영 지원사업 범위와 운영 절차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2015.12.28.)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 사업의 신청과 위탁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출처 : 자치법규시스템

소상공인 예산구조와 지원 조직역량

- 전북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중 성장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회적 안전망에 투입되는 예산의 약 1/3 수준으로 소상공인 성장과 육성을 위한 예산이 크지는 않은 상황
 - 2025년 전북지역 소상공인 정책은 사회적안전망 확보, 성장지원, 전통시장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됨
 -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사업은 총 7건으로 450억원, 성장지원 159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163.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11백만원이 투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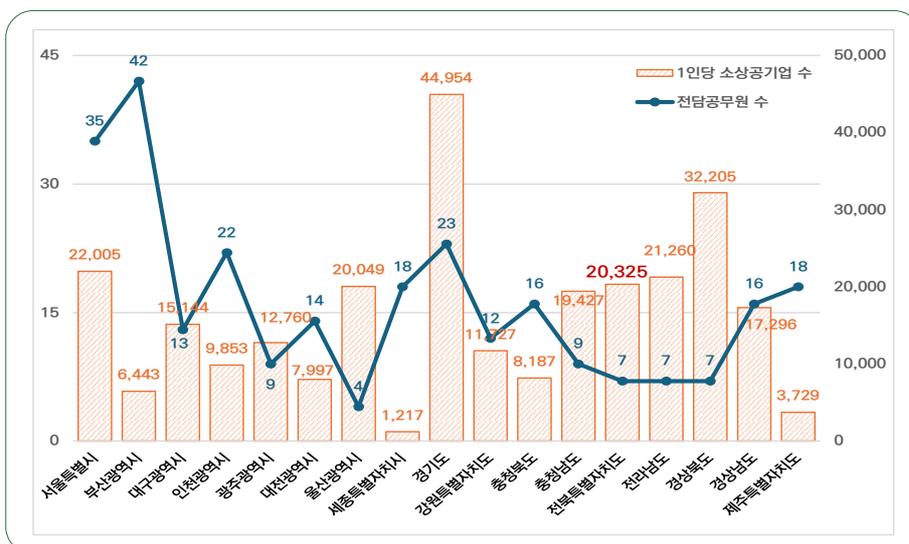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부문	예산액(억원)	세부사업
사회적안전망	450	회생보듬자금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조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성장지원	159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희망센터 관리 운영, 전북민생솔루션 등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163.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4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1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원 총액	2783.6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내부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정리

-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 규모에 비해 소상공인 업무 담당인력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업무 담당 인원은 7명으로 담당 공무원 1인당 담당 소상공인업체 수는 20,325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전국 5위)
 - 담당 공무원 1인당 소상공기업수는 경기(44,954명), 경북(32,205명), 서울(22,004명), 전남(21,260명) 순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담공무원 및 1인당 전담 소상공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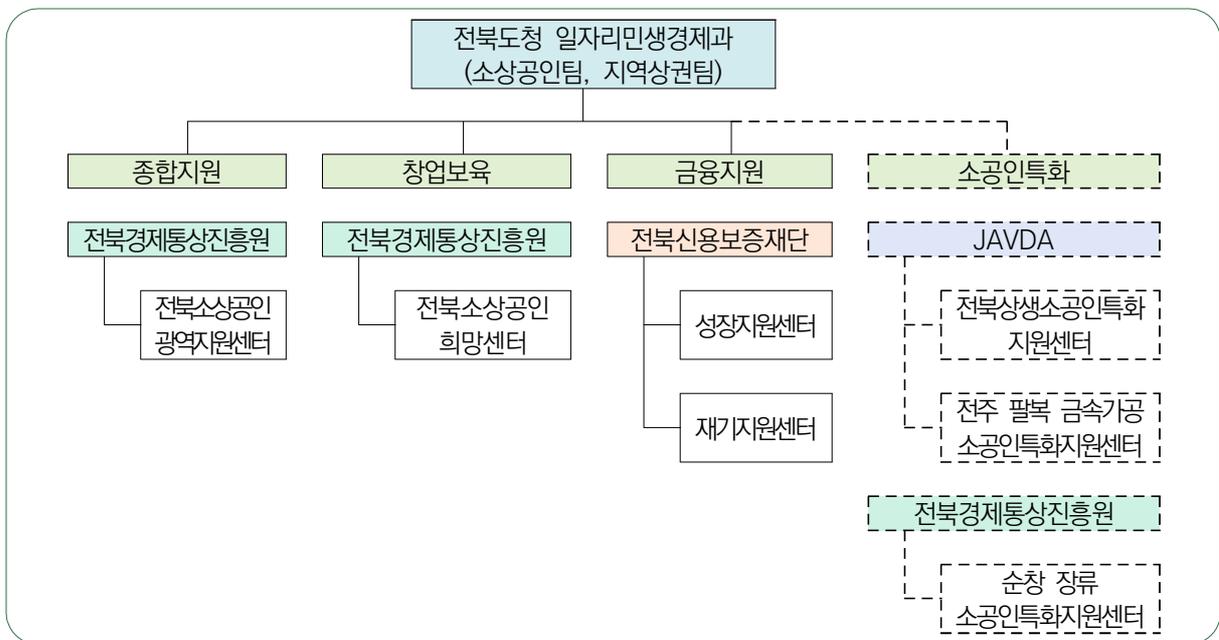


출처 : 각 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 전북의 소상공인 정책지원의 전달체계는 전북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를 중심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벤처기업육성속진지구발전협의회(JVADA) 등을 통해 이뤄짐
- 전북 내 소상공인 정책지원기관의 역할을 기준으로, 종합지원, 창업보육, 금융지원, 소공인특화로 구분할 수 있음
 - (종합지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컨설팅, 사업장 개선, 판로지원, 우수기업 발굴, 폐업 및 보험료 지원 등의 종합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창업보육)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공간과 더불어 보육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금융복지 상담, 경영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장지원센터, 재기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 (소공인특화) JVADA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운영 중이며, 소공인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맞춤형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북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Ⅲ.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 사례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개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에 맞춰 지역과 중앙정부의 기업 육성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주요내용

- 육성체계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 체계를 통해 돈움기업이 도약기업으로, 도약기업은 선도기업으로, 나아가 스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명칭 및 주요 내용〉

단계	명칭	주관기관	매출액 기준 (예시, 변동 가능)	주요 육성 목표 및 내용
1	돈움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기술 혁신성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ESG 경영 활성화 등 지원 (지정기간 3년)
2	도약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 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등 지원 (지정기간 3년)
3	선도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집중 지원
4	혁신기업 (또는 스타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북자치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3년 평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 (2025년 신설 단계 포함)
5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등	글로벌 시장에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

주요특징

- 유기적 연계: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도모
- 맞춤형 지원:각 단계별 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술개발(R&D), 마케팅, ESG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 자금 지원(융자 및 이차보전) 등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
- 지역 경제 기여:기업의 성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제도 정비:내수와 수출을 모두 실현한 기업을 위한 혁신기업단계 신설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

2. 부산광역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전략(부산 라이콘)

개요

- 부산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창업-성장-도약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부산 라이콘(B-LICON) 육성전략'을 수립
 - * B-LICON: Busa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의 약자로, 생활(라이프)과 지역(로컬)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부산 지역의 혁신 소상공인을 의미

주요내용

- 부산시는 'B-LICON'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를 4개 단계(준비-성장-도약-기반마련)로 나누고 4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B-LICON' 육성4대 전략 및 10대 과제〉

성장단계	전략	주요 과제(지원 내용)
준비 단계	예비 부산 라이콘 발굴 및 육성	1. 라이콘 타운 구축 및 운영: 혁신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창업 전 체험형 점포(테스트베드)를 운영 2. 라이콘 창업사관학교 운영: 졸업한 예비창업자 50명에게 최대 4,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3.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창업 아이템 공모대회, 경영혁신 역량 강화 멘토링 등을 운영합니다.
성장 단계	부산 라이콘 집중 육성	4. 성장사다리 지원: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10개사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5. 부산발 기창업 및 유망업종 라이콘 성장 지원: 부산발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 육성 및 지역 유망업종(커피산업 등) 특화 지원을 추진 6. 특별 보증 프로그램 운영:고(高)매출 기업 등에게 2억 원 한도내에서 최초 1년간 2.5%, 이후 4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하는 특별 보증을 운영
도약 단계	부산 라이콘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7.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및 전문과정을 운영 8.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수출 지원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부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
기반 마련	지속 성장 및 안전망 강화	9. 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제도개선 : 라이콘타운 내 규제 신고센터 신설 10. 재기지원 안전망 확충 : 폐업자 재기지원 브릿지 보증 채추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확대, 폐업 소상공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 지원

출처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4.4.25.)

○ 이 외에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 ‘부산 라이콘 펀드’ 50억원 규모로 조성하였음

- 혁신 소상공인의 성장·육성 정책에 투자를 접목,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 수행 기대

〈부산 라이콘 펀드 조성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목적) 벤처투자를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성장·창업생태계 조성○ (조성기간) 2025년○ (투자대상)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조성규모) 50억원(가칭부산 혁신 스케일업 모펀드 70% + 민간투자 30%)○ (운 용 사) 모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에서 공모·선정○ (주요내용) 역내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 40% 이상 의무투자 (+10% 가능) 및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모펀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속투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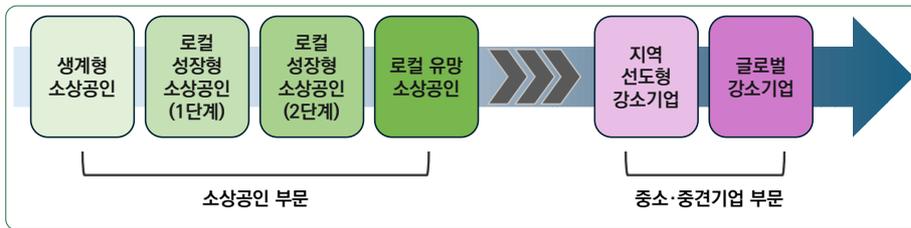
출처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5.3.6.)

IV. 전북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 전북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구축

- 소상공인은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작고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집단이자 가장 영세한 단계로 지역 사업체의 대부분이 이 단계에 속함
- 잠재적 역량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기업가로 성장시키는 것은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경제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대상의 구분이 아닌 경영환경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성장사다리 육성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사다리〉



- 즉 소상공인을 단순히 법정 정의에 따른 기준이나 생애주기로 구분하기 보다 산업단계,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맞춤형 육성 종합지원 체계(자금, 교육, 컨설팅, R&D, 판로 지원 등)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체계 구분 및 정책 방향(안)〉

구분	규모	특징	정책 방향
생계형 소상공인	- 매출규모 : 1억 4백만원 - 고용규모 : 개인 또는 가족단위	- 혁신성 낮음 - 최소 생계 유지가 주된 목표 -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폐업 안전망 확보 지원	- 보호와 지원 - 폐업시 출구 전략 마련 - 디지털전환 초기단계 유도 - 소액대출 단기적
로컬 성장형 소상공인 (1단계)	- 매출규모 : 5억 이하 - 고용규모 : 5인 미만(5인 정규직)	- 혁신시도, 성장잠재력 보유 - 기업 브랜드화가 목표	- 성장단계 진입, 브랜드경쟁력 확보 - R&D, 고용지원 - 유통채널 확대, 지식재산권 확보 - 디지털전환 중급단계 유도
로컬 성장형 소상공인 (2단계)	- 매출규모 : 10억 이하 - 고용규모 : 5인 미만(5인 정규직)	- 혁신주력, 성장력 확대 - 지역기반 스케일업 및 브랜드화가 목표	- 지속성장, 브랜드경쟁력 제고 - R&D, 고용지원 - 유통채널 확대, 지식재산권 확보 - 디지털전환 고급단계 유도 경영
로컬 유망 소상공인 (지역대표)	- 매출규모 : 10억 이상(※사업분야별로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고용규모 : 10인 미만(정규직 9인)	- 혁신적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우수 - 소기업을 넘어 중기업이상의 성장 지향 - IT 융합, 글로벌 진출, 벤처 투자유치 등 목표	- 스케일업 및 투자 유치 - 프랜차이즈, 글로벌시장 진출 - 전문인력지원 - 시설장비 투자 지원

2. 전북 소상공인 성장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 전북지역 소상공인 정책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단발성·개별 단위 지원은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반 구축형 모델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연계형 지원 패키지 즉, 소상공인 성장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 경영진단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성장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아이템과 기업가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

〈시범사업 예시 : 전북 소상공인 성장고도화 패키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지역 소상공인을 지역의 대표 소상공인이자,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지원대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소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공간, 사업자금, 교육, 인력, 세제, 마케팅, 상품화, R&D, 투자 연계 등 ● 사업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로컬브랜드형 : 지역의 가치자원(인문·자연환경, 역사문화, 명소, 특산물,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을 발굴 및 상품화하는 소상공인(창업자+기존사업자) ② 기술혁신형 : 기존사업에 ICT, AI 등을 결합하여 상품 및 경영혁신을 모색하는 소상공인 ③ 글로벌챌린지형: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성장패키지 관련 사례〉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 라이콘(LICORN) 타운>라이콘타운 세종점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1길 48
(규모) 523.08m²

【지역가치 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향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과 혁신을 돕고, 공간에서의 활동(제품전시, 체험, 교육)이 가능한 직주락형 창업공간

구분	규모	세부내용	비고
다목적 공간	133.25m ²	회의 및 강의실, 스튜디오, 탕비실	3층
입주공간 및 홍보존	218.29m ²	코워킹라운지, 입주사무실, 전담인력사무실	2층
전시 및 체험존	171.54m ²	창업기업 제품 전시공간, 체험카페	1층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창조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3. 전북 소상공인 성장촉진 기금 조성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며,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 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관련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감염병관리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유자계정	1983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업애로해소과
	투자계정	2023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기금	202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용 등을 지원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금융사회적경제과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지역경제 주체로서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투입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함

〈전북지역 소상공인 성장촉진 기금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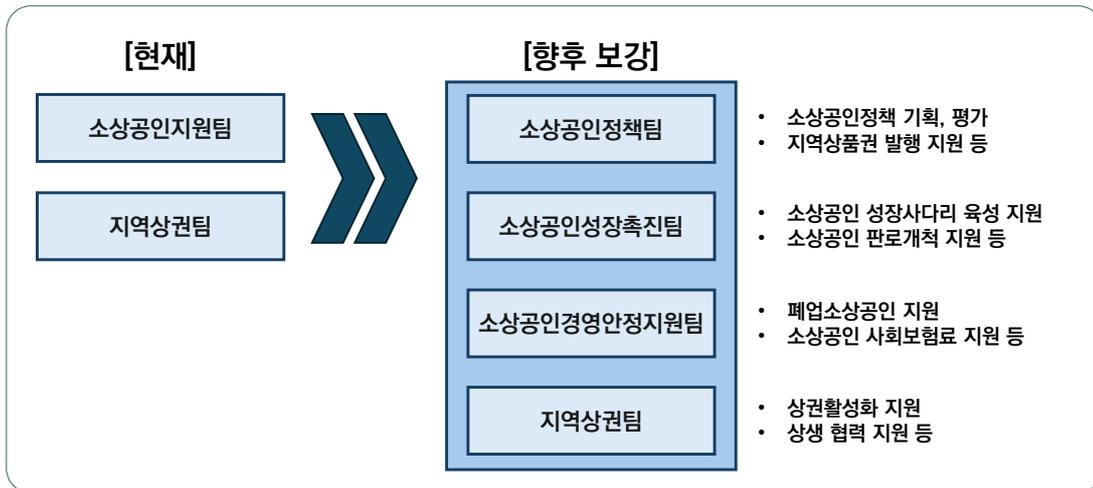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설치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개정 필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항 추가)
설치목적	전북지역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재원조성	국고 보조금, 지자체 출연금(도, 시·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등)	
기금용도	소상공인 육성 기반 구축 및 조사연구, 소상공인 창업지원, 판로개척, 자금지원 등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규모	기금용도별 현재 운용중인 사업예산 등을 참고하여 결정	
관리 책임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4. 전북 소상공인 전담부서 규모 보강

-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최전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는 그 역할에 비해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조직 역량의 측면에서는, 다변화되고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촘촘한 실행력을 담보할 만한 조직 거버넌스 및 전문 인프라의 확충이 미흡
 -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의 막대함에 비추어 볼 때, 현 재정 투입 규모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의 질적 성장(Scale-up)을 견인하기에는 본질적인 제약으로 작용
-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여도와 정책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직적 전문성과 재정적 투입 규모를 혁신적으로 재정립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소상공인 생태계가 마주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 조직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정책 집행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는 것이 필수적임

-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이들을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현 지원 조직을 '성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격상하고 그에 걸맞은 운영 역량과 조직 규모를 확보해야 할 시점임
- 소상공인 지원 조직을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닌, 지역 차원의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임

〈전북 소상공인 정책지원 역량 보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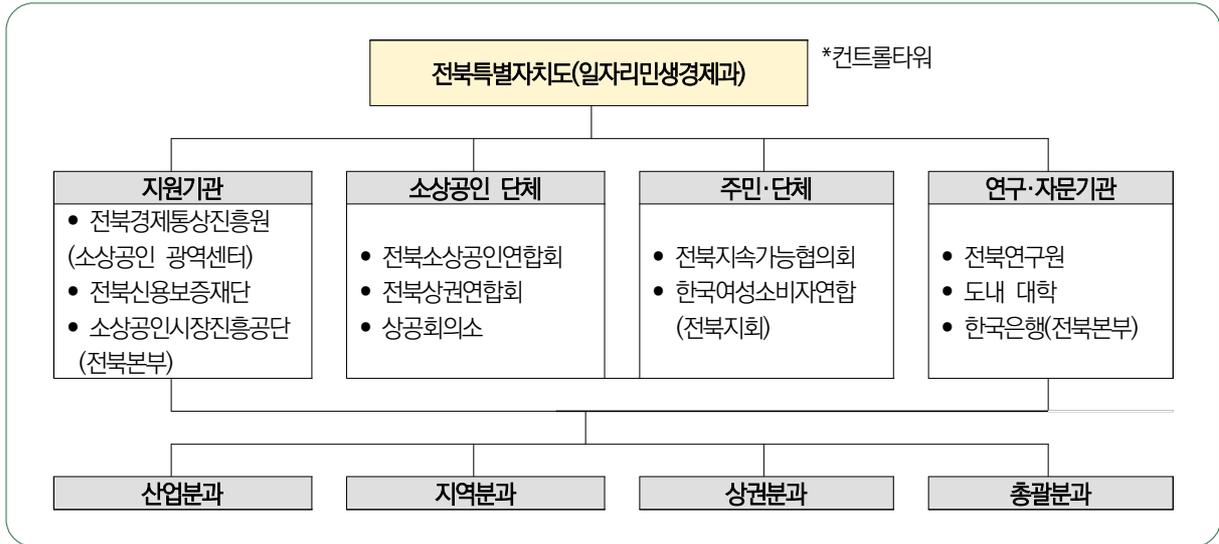


5. 전북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소상공인은 음식업, 숙박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부문에 포진해 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 소상공인의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전달-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함
- 참여주체로는 정책의 공급자인 지자체, 정책수요자인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참여, 소상공인 정책 추진의 결과가 소비자 후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단체의 참여도 중요함
-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내부구조에 지역의 특성과 지역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분과는 산업별로 다양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반영하거나 산업간 이해관계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지역분과는 시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굴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조율 기능을, 상권분과는 상권별 발전사업 논의 및 갈등구조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총괄분과는 3개 분과를 운영·지원 및 정책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함

- 지역단위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요구 반영 및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성(안)〉



참고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4.4.25.)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5.3.6.)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홈페이지(<https://www.korea.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http://www.jblc.or.kr/>)

자치법규시스템(<https://www.elis.go.kr/>)

각 시도 홈페이지

Vol. 339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